

# 촛불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촛불로 탄생한 정권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평등, 평화, 그리고 공공성이 강화된 민주공화국”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역사적 책임을 가진 정권입니다. 그러나 집권 3년을 맞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 것일까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단지 정권 퇴진을 위해서 앉아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새로운 삶이고, 새로운 학문이고, 새로운 철학이고, 새로운 의식이고, 새로운 문화고, 우리의 새로운 삶이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우리 단군 이래 없었던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야 한다. 이것은 희망의 출발이다. 1945년도에 해방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압제하던 모든 사슬로부터 우리가 진정으로 해방을 맞이할 그날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전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혁명을 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혁명하고, 우리의 제도를 혁명하고, 우리의 의식을 혁명하고, 우리의 압제를 다 혁명해야 한다.”

촛불 집회에서 도올 김용옥 선생이 한 말입니다.

그 혁명의 길을 찾아야만 합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우리는 원합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해방이 후 누적된 적폐를 청산해야 합니다.

수백만 촛불투쟁을 이끌어 낸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2017년 12월 한국사회 개혁을 위한 10대 분야, 100대 과제를 시민들이 참여하여 만들고 이를 발표하였습니다.

한번 꼼꼼하게 보시고 점검하면서 점수를 매겨 보시지요? 진정 얼마나 변했는지 말입니다.

#### 퇴진행동 발표 촛불개혁과제

	세부 개혁 과제
재벌체제 개혁	① 이재용 등 재벌 총수 구속 ② 재벌총수 등 범죄수익환수 특별법 제정 ③ 불법·탈법, 순환출자 등에 의한 총수일족의 부당 경영개입금지 입법 ④ 법인세 인상 ⑤ 사내유보금 사회 환수 ⑥ 재벌의 비정규직 남용 근절과 불법파견·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 ⑦ 재벌의 산별 교섭·하청노동자 직접교섭 참여, 동일 기업집단 내 동일 단체협약 적용 ⑧ 골목상권 파괴하는 유통재벌 규제와 중소기업 살리기 입법 ⑨ 대리점/프랜차이즈 등 재벌 대기업의 갑질 근절 ⑩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공안통치기구 개혁	<국정원 개혁> ① 수사권의 분리 및 이관 ② 국내 정치 개입 금지와 수사권 폐지 ③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권한 폐지 ④ 국정원에 대한 의회의 통제 강화 <검찰 개혁> 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⑥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⑦ 청와대와 검찰의 연결 고리인 검찰의 청와대 편법근무 방지 ⑧ 법무부의 탈검찰화 및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⑨ 검찰 직선제 및 주민소환제 입법안 <경찰 개혁> ⑩ 수사-치안경찰을 이원화를 통한 분리 ⑪ 국가 경찰과 지방자치경찰의 이원적 구조화 ⑫ 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시민참여를 통한 정상적 운영 ⑬ 재판관 인적구성의 다양성을 강화하는 방안 ⑭ 감사원 감사기능, 독립성 강화 및 국회 이관 ⑮ 행정부의 시행령 통치 차단
정치, 선거제도 개혁	① 18세 선거권 보장 ②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③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④ 선거 시기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⑥ 국민발안제 도입

	세부 개혁 과제
좋은일자리·노동기본권	① 최저임금 1만원·최저임금법 개정 ②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 ③ 간접고용·특수고용 등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 ④ 노동시간 단축-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⑤ 청년 좋은 일자리 창출 ⑥ 모든 노동자 '노조할 권리-노동3권' 보장 ⑦ 노동조합 활동 관련 손해배상청구·가압류 금지 ⑧ 해고요건 강화 ⑨ 고령노동자 노동조건 개선-노동기본권 보장 ⑩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복지·공공성·생존권	① 부양의무제·장애등급제 폐지 ② 공공임대주택,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공공병원 등 공공인프라 확충 ③ 주거권 보장 ④ 아동 권리보장 ⑤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불안 해소 ⑥ 청년 실업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⑦ 건강보험료자 20조로 의료비인하, 어린이·노인부터 무상으로 ⑧ 공공병원 확충 및 비영리민간병원 공공성 강화 ⑨ 과잉진료규제와 영리병원 허용을 포함한 의료민영화 중단 ⑩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와 기업 책임 강화로 보장성 강화 ⑪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정규직 의료인력 확보 및 외주화 중단 ⑫ 밥쌀수입중단·쌀값 보장 ⑬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을 통한 농가소득 보장 ⑭ 개방농정 철폐와 식량자급률 제고 ⑮ 행정대집행법 재개정과 무분별한 강제철거 중단 ⑯ 노점감축정책 중단과 노점상 생존권 보장 ⑰ 선대책 후철거로 순환식 재개발 정착
성평등과 사회적 소수자 권리	① 성별 임금격차 해소 ② 인공임신중단(낙태)죄 폐지 ③ 남성성계부양자 가족 모델에 따른 복지체계 개편 ④ 성소수자 차별 해소
남북관계·외교안보정책 개혁	① 남북당국 회담 포함한 대화 재개와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 복원 ②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상봉과 민간교류 복원 ③ 남북 간 합의 재확인고 이행 ④ 사드 배치 철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한미일 MD 및 군사동맹 구축 중단 ⑤ '위안부' 굴욕 합의 무효, 재협상 및 한일과거사 해결 ⑥ 불평등한 한미관계 개선 ⑦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 추진 ⑧ 조약 체결, 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 통제권 강화 ⑨ 외교, 국방 분야 정보공개 강화 통한 국민 알권리 및 주권 보장 ⑩ 국방비 축소, 군복무기간 단축, 군인권 강화, 군 정치개입 금지 등 국방개혁 ⑪ 미국 요구에 따른 무분별한 해외파병 반대
위험사회 구조 개혁: 안전과 환경	① 지진위험 지역의 원전 중단(노후원전 폐쇄와 신규원전 중단) ② 4대강 16개 보 수문 상시 개방 및 책임자 청문회 ③ 위험 요인들에 대한 성역 없는 정보공개 ④ 독성평가 없는 화학물질 사용과 유통의 금지 ⑤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원청 책임강화 입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 ⑥ 중대재해기업처벌 특별법 제정 ⑦ 규제프리존법 등 안전규제완화법안 폐기 ⑧ 안전 사고 피해자 구제 권리 강화 입법 ⑨ 대중교통 안전성 강화: 철도 지하철 2인 승무 의무화
교육불평등 개혁·교육공공성 강화	① 학력차별철폐(고용/승진/임금차별금지)·학벌폐지(학교평준화) ②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실현, 반값 대학등록금 실현 ③ 특권경쟁교육 폐지 및 평등교육 실현(초중등교육법 개정) ④ 고등교육예산 GDP 대비 1% 이상 확보 및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⑤ 입시 폐지·대학 평준화 및 국공립대통합네트워크 구성 ⑥ 비리부실사학재단 퇴출과 공영화 및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 ⑦ 교육비정규직 철폐와 직접고용으로 '비정규직 없는 학교' 실현 ⑧ 교수·교사확보를 정규직으로 100% 확보 의무화 ⑨ 시간강사법폐지와 각종 비정규교수제도를 통합한 연구강의교수제 도입
언론개혁과 자유권	① 언론장악방지 4법 개정 ② 집회시위자유 확대 ③ 시민사찰-블랙리스트 금지 입법 ④ 국가보안법 폐지 ⑤ 테러방지법 폐지 ⑥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⑦ 양심수 전원 석방

# 한국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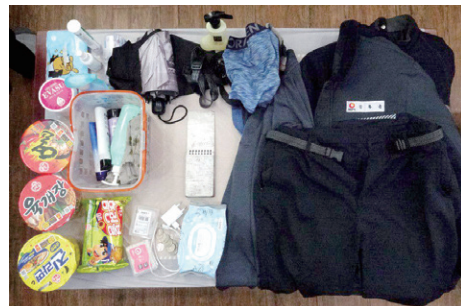
“죽음의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죽음은 무의미한 통계 숫자처럼 일상화돼 아무런 충격이나 반성의 자료가 되지 못하고, 이 사회는 본래부터 저러해서, 저러한 것이 이 사회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여기게 됐다. 해마다 2천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노동 현장에서 안전사고로 죽어 나간다.” - 2019년 9월, [김용균이라는 빛] 북콘서트에서, 소설가 김훈

컵라면이 유독 아프게 남았습니다. 꽃을 피우기도 전에 죽음을 맞이한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6년 5월 28일,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 정비를 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구의역 김군과 2018년 12월 11일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24)의 유품은 어쩌면 이리도 닮은 꼴일까요?

가지런히 놓인 컵라면과 작업도구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서울지하철 구의역 비정규직 노동자 김군의 유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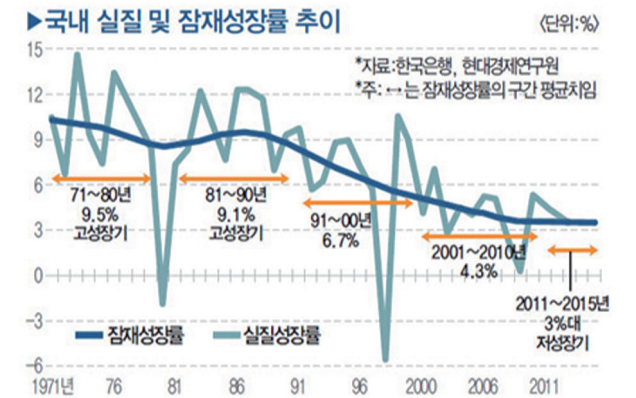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의 유품

## 우리가 사는 사회

### 1. 경제 이야기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경기 불황과 경제침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의 어려움이 곧바로 노동자, 서민 등 취약계층의 삶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발표한 통계청의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하위 20%의 근로소득은 15.3% 하향한 반면 상위 20%는 월 942만원으로 3.2%가 증가했습니다. 사회양극화가 해소되기는커녕 상·하위 20%의 소득격차가 5.3배로 역대 최대입니다.

문제는 이런 구조적인 불황과 경기침체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서 점입니다. 한국경제의 구조적 위기는 1970~80년대의 고성장기 이후 1990년대를 거쳐 IMF 구제금융위기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더욱 하락 중입니다.



경제성장의 3가지 요소라 할 수 있는 자본투자, 노동력, 기술혁신 모두가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빈곤 늪’의 장기화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규제 완화에 집중된 경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재벌친화정책으로 선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재벌기업 지배구조와 시장질서의 전면적 재편이 공론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신산업 육성이란 핑계와 일본의 수출규제를 빌미로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규제 샌드박스 3법으로 알려진 “지역 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 “산업융합 촉진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특별법” 통과, 소위 화관법(화학물질 관리법)과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제 완화 시도가 그것입니다. 삼성 봐주기는 아주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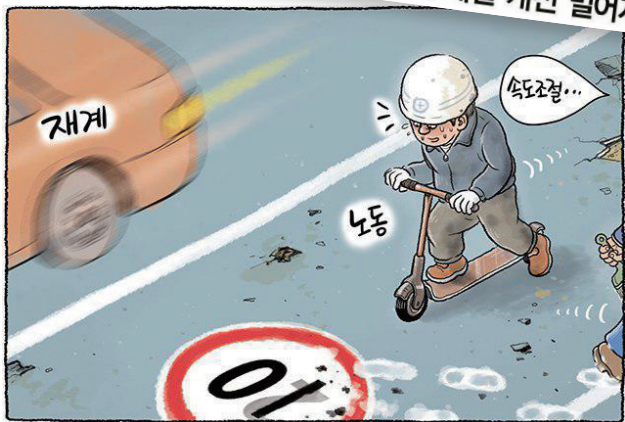
東洋日報

2019년 10월 11일 금요일 A01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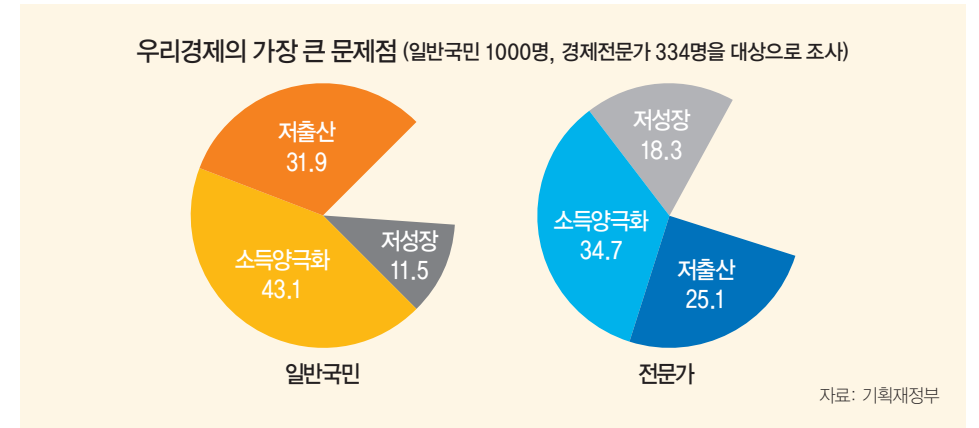


문대통령, 울둘이 이재용과 7번째 만남...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중남 경제 정상회담을 통해 공상 직권들과 대화하여 손을 흔들고 있다. 앞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면)이 보인다. “우리 삼성이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줘 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산... 청와대사진기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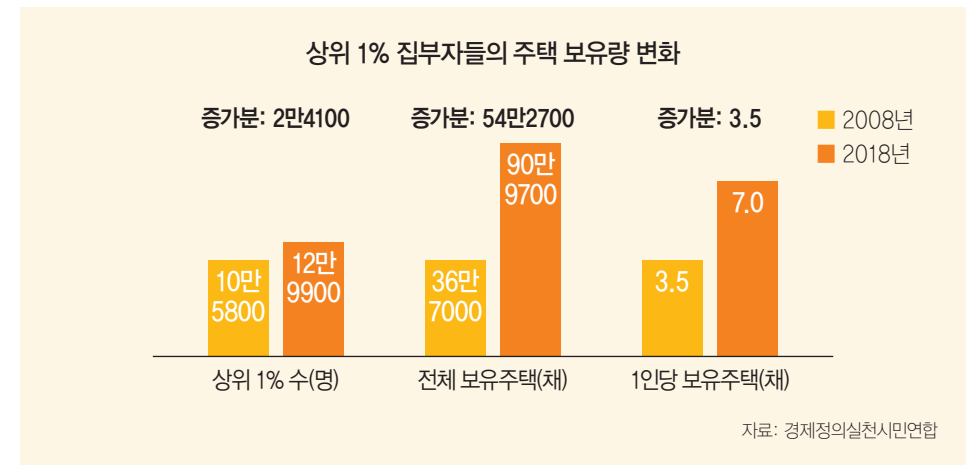
투자 내리막에 ‘친대기업’ 행보 가속...경제 체질 개선 멀어져



많은 국민들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소득 양극화를 꼽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으로는 양극화는 점점 더 확대될 뿐입니다.



주택문제만을 볼까요? 주택이 490만채나 공급되었지만 그 중 절반이 넘는 250만채는 다주택자가 구매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12만9900명이 91만채를 소유하여 1인당 평균 3.5채에서 7채 소유로 두 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주택 소유를 제한하는 법이 필요하지만 평균 자산이 거의 40억원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 과연 그걸 찬성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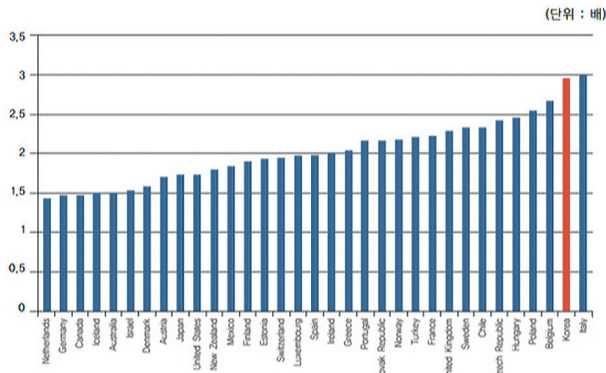
결국 문제는 정치입니다.

## 2. 사회 이야기

한때 유행했던 5포 세대라는 말을 아시지요. 청년들이 연애, 결혼, 출산, 대인관계, 내집 마련 등 다섯가지를 모두 포기하고 있다는 뜻에서 부르는 얘기랍니다. 최근 여기에 꿈과 희망을 포기한 것을 붙여 7포 세대라고도 합니다. 기막힌 세상입니다.

전체 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 비율이 최고 수준입니다. 최근 20대의 보수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 격화, 젠더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합니다.

OECD 국가들의 전체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 비율(2013년)



**한국일보** 2019년 03월 28일 목요일 A14면

### 위험한 20대... 미취업 30% "극단선택 고민"

취업준비 준비가거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20대 젊은이들이 상한 불건과 우울증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직을 준비 중인 미취업 20대 청년 30% 중 30%은 최근 6개월 사이에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20대 평균보다 30%나 높은 수치다.

27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표된 '20대 청년 심리·정서 문제 및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미취업 20대 청년 30%은 최근 6개월 사이에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20대 평균보다 30%나 높은 수치다.

이런 연구는 지난해 7.8월 20대 1,31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특히 구직 활동을 하는 취업준비생이나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 평균보다 높은 우울·불안 증상을 나타냈다. 상한 우울증상

취업준비 불안·경제적 취약 및 20대 평균보다 30%나 높아 7%는 "우울증 약물치료 필요" "대상 투상에 맞는 지원 마련을"

를 겪은 비율은, 구직 미취업 집단이 12.2%, 비취업자 취업집단은 8.9%로 평균 7.0%보다 높았다.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는 응답률은 구직 중인 미취업 집단이 20.6%로 가장 높았고, 이어 비구직 미취업 집단(28.8%), 전문대 재학생 집단(28.4%) 순이었다. 취업 여부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청년들의 정신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대학 졸업 후 1년 내 '가난'을 경험한 청년 중 90%은 정신건강이 양호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가난'을 경험한 청년 중 10%은 양호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가난'을 경험한 청년의 정신건강이 양호하다고 응답한 청년보다 높았다. 이는 '가난'을 경험한 청년의 정신건강이 양호하다고 응답한 청년보다 높았다.

이런 보고서는 우울·불안 증상과 자살 생각 유무(최근 6개월간) 등을 분석해 정

청년들의 심리·정서 위험수준을 △위험군 이하 △관심군 △중위험군 △고위험군으로 4단계로 분류했는데, 절반 이상(52.2%)이 상위정서적 문제가 있는 관심군, 중위험군, 고위험군 범주에 들어갔다.

이런 연구를 진행한 김지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취업의 대안 찾기를 위한 자립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한국 사회에 △20대는 불고 건강하기 때문에 정서문제는 개인 스스로 책임질 문제라는 "자기책임의 내면화" △취업이 되면 다 괜찮다는 식의 "취업만능론" △우려되는 더 위험해지는 "사회불교법" △개인적인 노력으로 상한 정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노력지상주의설"과 같은 편견이 만연해 있다고, 청년들의 심리·정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편견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지영 기자

국가별 행복지수가 OECD 34개 국가 중 32위입니다.

**저출산률 1위**  
(2018년 0.98명)  
**이혼증가율 1위**  
**낙태율 1위**

**자살률 1위**  
연평균 14,000여명  
(OECD 평균 2배)  
**청소년/청년 사망원인 1위**

**노인 빈곤률 1위**  
(49.6%)  
**노인 자살률 1위**  
**은퇴연령 71세로 1위**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플랫폼 노동을 중심으로 전 산업에 걸쳐 불안정 고용이 늘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에는 그 어떤 고용정책, 노동정책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각종 규제완화 속에서 극도로 왜곡된 고용관계와 불안정노동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권의 상태는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눈과 귀를 닫으면, 괜찮을까요? 오늘도 여기저기서 싸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 여전히 규명되고 있지 않은 세월호의 진실, 가난에 시달리다가 집단으로 자살하고 마는 가족들의 이야기, 몇 푼 되지 않는 돈을 벌기 위해 거리에서 종이를 줍는 노인들, 이제는 하나의 풍경이 되어버린 노숙자들의 모습...

이런 것들이 정말 다 완전히 남의 얘기일까요? 그런데 이런 세상을 사업장에서의 투쟁만으로 방어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노동조합을 하는 것이 정말 이 세상과 무관할까요?

**정치를 바꿔야 사회가 바뀝니다.**

### 3. 정치 이야기

우리 사회에서 가장 낙후한 영역은 정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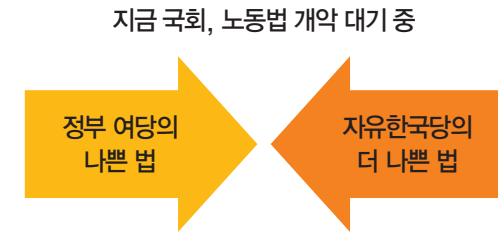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을까 싶은 많은 사람들이 국회에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야합하여 각종 노동악법을 통과시킵니다.

자유한국당이야 원래 그렇다 치고 민주당과 정부까지 나서서 민주노총을 싸잡아 비난하기 일쑤입니다. 저들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민주노총과 노동조합에 대해 짜여진 프레임에 짜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귀족노조, 철밥통, 밥그릇싸움, 기득권, 폭력... 심지어 이제 괴물로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노총 공화국이라 일컬어질 정도로 사실상 무법천지가 되어버린 상황이다. “대한민국이 민주노총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민주노총이 청년들의 일 자리를 빼앗고, 만들 수 있는 일자리도 못 만들게 하고 시급한 산업구조조정까지 방해하고 있다.” “국민이 감내하고 있는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법 위에 군림하려 드는 ‘괴물의 탄생’은 친노동을 표방한 현 정부가 자초한 일이다. 민주노총은 자기들과 통하지 않으면 모두를 적으로 간주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괴물이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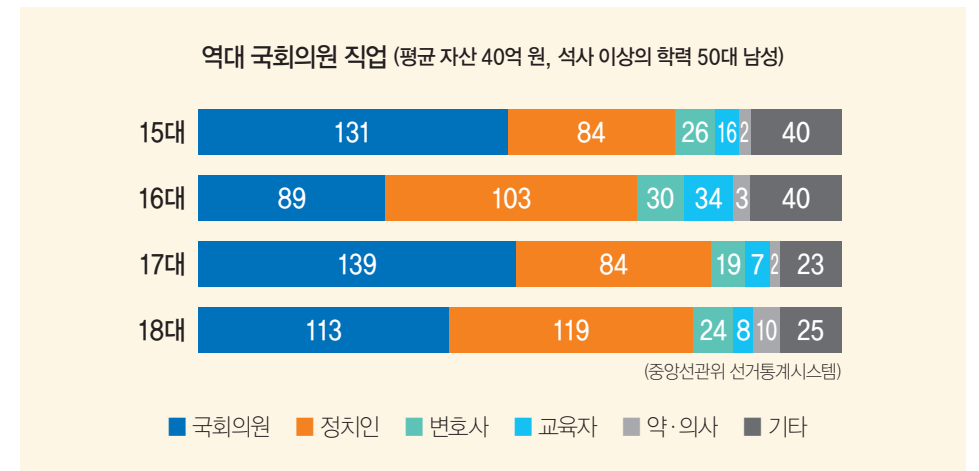
정부와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노총은 너무 일방적이어서 말이 안 통한다. 항상 폭력적인 방법을 쓴다. 미국 같으면 테러다.” 홍영표 민주당 전 대표의 말입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조차 “노동자와 노동단체는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며 민주노총을 공격합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노동자=밥, 민주노총=동네북인가요?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은 민주노총을 고립시키면서 각종 노동통제와 법 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직업분포를 한번 보십시오. 정치인, 의사, 약사, 변호사 등이 국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평균 재산은 38억 4,866억원이라고 합니다.(민주당 38억 5,829만원 / 자유한국당 28억 9,841만원, 민주평화당 21억 2,334만원, 바른미래당 20억 3,107만원)

우리 정치가 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과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 4. 노동 이야기

작년 5월 25일 여, 야가 손잡고 산업 범위 확대로 최저임금법을 개악했습니다. 그러더니 올해는 최저임금을 자기들 마음대로 끌랑 2.87% 인상하여 시급 8,590원으로 확정해 버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거짓이 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삭감법 통과(2018년 5월 25일, 국회 환노위)

### 최저임금법 개악 내용

### 2018년 5월, 산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법 개악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  
(2019년 일부 산업 점차 확대하여 2022년 전액 산입)

➔

상여금 배제  
사업주에게 주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노동조합(노동자 과반) '의견'을 듣도록 함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노조의 '동의' 구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무력화

그러더니 이제는 탄력근로제를 개악하려 합니다. 지난 2월 19일 민주노총이 배제된 상태에서 노사정이 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재계와 사용자들이 환호성을 지른 건 물론입니다. 박근혜정권의 낡은 노동적폐 청산은커녕 그와 똑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11월 국회에서 또다시 야합을 하려 합니다.



### 탄력근로제 개악 내용

단위 기간 6개월 확대 합의	유연성 대폭 늘렸고, 임금보전 불분명하며, 주도권은 사용자에게 넘긴 개악
도입 요건 완화	주별 근로시간 도입하면 사용자 임의로 근로시간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어
임금보전 조치	구체적 내용·기준 불분명, 사용자 임의로 임금보전 방안 신고할 수 있어
노동자 건강권	사용자 마음대로 근로시간을 정하면 과로사 위험, 산재사고 발생률 높아져
미조직 노동자 보호	노조 없는 곳의 근로자대표는 사용자 강요에 서면 합의할 수밖에 없을 것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를 포괄하는 87호와 98호 비준으로 “노조할 수 있는 나라”로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 노조 조직률이 10% 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너무나 당연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정책은 어디 있습니까? 1919년 만들어진 ILO에 우리나라는 91년 152번째로 가입했지만 협약비준진수에서는 187개 회원국 중 118위입니다. 현재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금지에 관한 협약을 모두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중국, 브루나이, 마셜제도, 팔라우, 투발루, 통가, 한국 등 단 7곳에 불과합니다. 창피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나쁜 것은 정부가 ILO 핵심협약을 빌미로 노조과괴법을 섞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10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노조활동 제한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노동권 제고로 사용자의 방어권이 필요하다”라는 사용자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법안입니다.

**정부가 비준하지 않은 ILO 핵심 협약과 비준 반대 이유**

ILO 핵심 협약	재계 등 반대 이유
<p><b>87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 협약’</b>  <b>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b>                      내용: 노동자는 어떠한 차별 없이 단체를 설립 가입할 수 있어야 하고 노조 가입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용 및 인사 청탁 등 비리 문제로 해고된 근로자의 노조 가입 허용하면 ‘노조의 정치화’ 우려</li> <li>•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까지 노조 설립 허용하면 전 강제 영역에서 파업의 일상화 우려</li> <li>• 공무원과 교사도 파업권을 얻게 되면 사회 혼란 우려</li> <li>• 해직 교사를 노조원으로 받은 전교조도 합법화 우려</li> </ul>
<p><b>29호 ‘강제노동 금지 협약’</b>  <b>105호 ‘강제노동 철폐 협약’</b>                      모든 형태의 강제근로 등 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 복무를 대체하는 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일반 사원보다 임금이 적어 강제노동에 해당</li> </ul>

이번 개악안은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ILO협약은 물론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까지 침해합니다. 특히 직장점거를 금지하는 것은 사용자들이 악용하여 파업을 포함한 모든 쟁의를 차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ILO 핵심협약을 이행하기는커녕 오히려 역행하는 법입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7대 입법과제(민주노총)**

순번	의제	주요내용	관련 조문
1	비정규직 노조할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li> <li>•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li> </ul>	노조법 2조 1호 노조법 2조 2호
2	온전한 노조할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고자, 실업자/구직자 조합원 자격 인정</li> <li>• 해직 교원·공무원의 조합원 자격 인정</li> <li>• 직급/직무에 따른 공무원 조합가입 자격 제한 철폐</li> <li>• 노조 임원 자격 제한(조합원 한정) 삭제</li> </ul>	노조법 2조 4호 라목 교노법, 공노법 노조법 23조 1항
3	노조설립 신고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질적 심사권한 및 반려제도 폐지</li> <li>• 온전한 ‘설립신고주의’로 운용</li> </ul>	노조법 12조 시행령 9조 2항
4	복수노조 자율교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수/소수노조의 노조할 권리 보장</li> <li>• 교섭창구단일화 강제제도 폐지</li> <li>• 소수노조의 교섭과 쟁의권 보장</li> <li>• 산별교섭 제도적 보장</li> </ul>	노조법 29조 2항 ~ 29조의5
5	노조전임자 (타임오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임자 임금지급 자율화(노사자치원칙)</li> <li>• 타임오프 및 벌칙조항 폐지</li> </ul>	노조법 24조 2항 노조법 81조 4호
6	공익사업장 노조할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사업 범위 합리적 조정</li> <li>• 필수유지업무 합리적 조정과 대안마련</li> </ul>	노조법 42조의2~6 노조법 71조
7	파업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업 관련 업무방해죄 적용금지</li> <li>• 손배/가압류 관련 제도개선</li> </ul>	형법 314조 1항 노조법 3조



**탄력근로제·최저임금 개악은 기본 나쁘게 혹은 더 나쁘게**



## 그래서 한국에서 노동자의 권리는?

지금까지 살펴보았지만 촛불항쟁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이 개혁은커녕 후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 전체를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과제가 정치를 개혁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노동자가 그 맨 앞에 있어야 합니다.



# 이제는 바꾸자, 정치

환경과 생태의 위기와 사회적 불평등 심화, 금융위기와 불로소득 자본주의의 문제, 자본의 이윤축적의 위기, 출생률의 급감 등은 우리 사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노동권의 추락과 보호무역주의의 득세, 4차 산업혁명과 기술혁신에 의한 고용없는 성장, 불안정 노동의 증가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에서 민족주의가 득세하고 인종주의가 만연해 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우익 파시즘에 가까운 세력들의 집권이 확대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모든 행위의 결론은 “정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관심하거나 실천적 행동이 이어지고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뀔 때가 되었습니다. 플라톤의 말대로 “정치를 외면한 결과는 가장 우매한 자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박근혜정권의 몰락과 재판과정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렇게 우매한 사람들의 지배를 당연하게 받았던 것에 대한 좌절 아닙니까?

세계 주요 국가 보수 정권 및 주요 정책 ▲중도 보수 ▲민중주의 · 대중주의

<b>미국</b>  <b>도널드 트럼프</b> (2017-) ▲ 규제 완화,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 대외개입 축소, 동맹에 방위 부담 요구	<b>영국</b>  <b>테라사 메이</b> (2016-) ▲ 스 <b>데이비드 캐머런</b> (2010-2016) 긴축 재정, 시장 개방, 소수자 보호, 이민자제한	<b>독일</b>  <b>앙겔라 메르켈</b> (2005-) ▲ 긴축 재정, EU 기법 리더십 구축, 가족 중심 사회안전망 구축, 이주인 포용
<b>프랑스</b>  <b>에마뉘엘 마크롱</b> (2017-) ▲ 공공부문 · 노동개혁, EU 통합경제 추진	<b>이탈리아</b>  <b>주세페 콘테</b> (2016-) ▲ 스 이민 통제, EU 회의주의, 저소득층 지원	<b>폴란드</b>  <b>마테우스 모라비에츠키스</b> (2017-) ▲ <b>베이타 시트워</b> (2015-2017) 이민 통제, EU 회의주의, 가족 복지지원금 투자
<b>헝가리</b>  <b>오르반 빅토르</b> (2010-) ▲ 스 단일세, EU 회의주의, 난민 진입 제한	<b>오스트리아</b>  <b>제바스티안 쿠르츠</b> (2017-) ▲ 스 이민 통제, EU 회의주의, 공공 개혁	<b>터키</b>  <b>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b> (2003-) ▲ 스 이민 통제, 자유 무역 유지, EU 가입 추진, 2016년 이후 연론 탄압, 국가주의 강화
<b>인도</b>  <b>나렌드라 모디</b> (2014-) ▲ 스 인두민중주의, 화폐 · 세금 개혁, 규제 완화	<b>일본</b>  <b>아베 신조</b> (2012-) ▲ 스 '아베노믹스' 경기 부양, 재무장 개혁 추진	<b>호주</b>  <b>스콧 모리슨</b> (2015-) ▲ 스 토니 애벗(2013-2015) 규제 완화, 자유 무역 협정 확대, 이민 제한, 중국 견제
<b>브라질</b>  <b>미셸 테메르</b> (2016-) ▲ 스 정부 지출 제한, 연금 · 노조 개혁 추진	<b>아르헨티나</b>  <b>마우리시오 마크리</b> (2015-) ▲ 스 환율통제 폐지, 국제 금융 시장으로 복귀	

## 국회 앞 집회 대신 국회를 점령하라! Occupy parlia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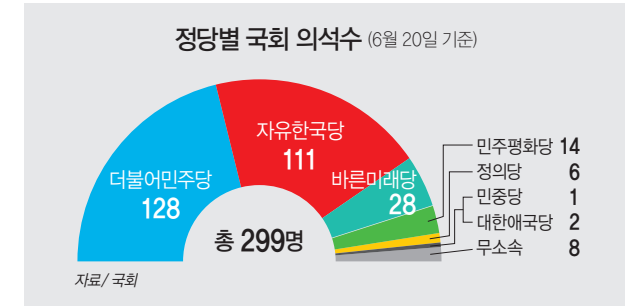
매년 우리는 국회 앞에서 집회를 하곤 합니다.

노동자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각종 노동악법을 아주 쉽게 거대 여당과 야당이 합의하여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저지하자, 저지하자!” 이게 우리의 구호이곤 합니다.

특히 올해 5월 30일 국회앞에서의 집회를 이유로 민주노총 위원장이 경찰에 출두해야 했고, 조직실장 등 주요간부 3명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 것일까요? 물론 대중투쟁을 통해 정치, 사회, 경제 모든 것을 바꾸는 노동운동의 투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2019년 하반기 대규모 집회와 파업 투쟁 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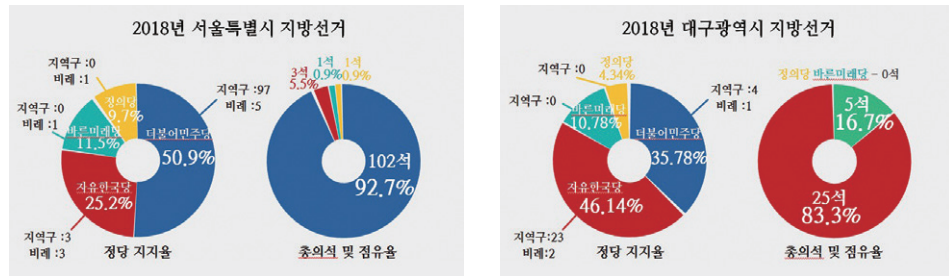
### 노동기본권 쟁취·노동개악 저지·비정규직 철폐·사회공공성 강화·재벌체제 개혁 한눈에 보는 하반기 투쟁



그러나 투쟁과 동시에 2020년 4월 15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국회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변화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정치와 삶을 바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8월 29일 정치개혁특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에 회부되어 90일 동안 검토를 받으면 되고, 설령 자유한국당이 방해하더라도 11월 29일 이후에는 본회의 상정이 가능해 집니다. 12월 본회의에서 149명만 찬성하면 21대 총선부터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과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국회의원들은 소선거구제라는 현재의 선거법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 결과를 보십시오. 서울은 시퍼렇고, 대구는 시뻘겍습니다. 서울에선 민주당이 50.9%의 지지율로 92.7%의 의석을 차지했고, 반대로 대구에선 자유한국당이 46.14%의 지지를 가지고도 83.5%의 의석을 챙겼습니다. 대표적인 승자독식의 게임입니다.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선거법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역주의라는 나쁜 악습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한마디로 선거에서 지지받는 득표율만큼 의원이 당선되어야 한다는 선거제도입니다. 아직 소수의 지지밖에 못 받고 있는 정당이라도 그 당을 지지한 국민의 지지만큼 의석을 차지해야 한다는 단순한 법입니다.

1993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네덜란드에서는 노동조합의 지위가 향상되고, 가족수당제도가 도입되고, 최저임금도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공공주택 임대사업이 개선되고, 가족수당제도가 도입되고, 민영화되었던 산재보험을 국영화했고,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를 실현했다고 합니다. 거대정당만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가진 진보정당들이 국회에 들어가고, 청년과 여성 등의 진출이 높아진 결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 30대 이하는 3명에 불과합니다. 여성의원 비율은 17%인데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등 복지국가들은 40%선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거대정당들이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심 그대로를 반영하는 선거법이 시행되면 자신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1993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환된 이후 뉴질랜드는 —**

- 최저임금 인상
- 노조 지위 강화
- 공공주택 임대사업 개선
- 가족수당제도 도입
- 고소득층 증세
- 민영화되었던 산재보험 국영화

**— 이 모든 변화가 현실로!**

###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에 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뮬레이션 결과(중앙 선거관리위원회)

	20대 총선결과	같은 결과를 선거법이 개정되었을 경우로 하면
새누리당	122석(지역구 105석, 비례대표 17석)	109석(지역구 94석, 비례대표 15석)
더불어민주당	123석(지역구 110석, 비례대표 13석)	107석(지역구 99석, 비례대표 8석)
국민의당	38석(지역구 25석, 비례대표 13석)	60석(지역구 20석, 비례대표 40석)
정의당	6석(지역구 2석, 비례대표 4석)	14석(지역구 2석, 비례대표 12석)
무소속	11석(지역구 11석)	10석(지역구 10석)

[정치개혁 공동행동]이라는 민주노총과 우리 노조가 함께하는 연대단위가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권자전국회의, 경실련, 참여연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곳에서 활동하는 570여 단체가 함께 정치를 바꾸려는 노력을 진행 중입니다.

이 차원에서 국회를 개혁하는 위한 행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30일, 운동을 대중적으로 선포하고 이어 총선까지 지속적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연동형 비례제 도입하라, 국회를 바꾸자” 라는 대중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3대 핵심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총선 일정이 본격화되기 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의원 정수를 일부 확대해 지역 대표성을 보장하면서도, 다양한 집단과 계층, 약자와 소수자의 의사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 둘째, 의원 정수를 확대하더라도 국회 예산은 동결해야 합니다. 특히 국회의원 스스로 책정해 온 수당(세비)를 봉급으로 일원화하고, 100% 과세하는 등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 셋째, 국회의장 산하에 ‘국민소환제 도입 등 국회의원 견제 장치 마련을 위한 범국민적 논의기구(가칭)’ 구성을 제안합니다. 선거 때 만이 아니라 임기 중에도 주권자인 국민이 국회의원을 견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원 징계 제도의 실질화, 징계 청구권 보장, 국민소환제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이 제안되고 있는 만큼, 국회가 범국민적인 논의 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힘들을 모아 11/23(토), 오후 2시, 국회 앞, <패스트트랙 선거법 처리하라! 국회를 바꾸자!(가칭)> 집회를 개최합니다. 모두 같이 해야지요? 미리 일정을 비워주세요.

# 언제까지 진보정당 탓?

2008년 민주노동당의 분당 사태 이후 노동자 정치운동은 10년 넘게 혼돈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진보정당이 다수여서 선택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진보정당의 분열이 노동조합으로 연장되고 있는 데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한 때 ‘노동운동의 성지’라고도 불렸던 울산에서 현대중공업 정몽준 회장은 다섯 번이나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대통령에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노동자들의 지지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촛불항쟁 이후에는 민주당에 집단 입당하는 조합원들도 많이 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면 된다” 대신 “해도 안된다”라는 말이 더 많이 들리기도 합니다. 희망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오래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벗어납시다. 우리 스스로가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일상적으로 노동정치를 실현할 진보정당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만약 선거법이 개정되면 진보정당의 성장에 있어 이전과 전혀 다른 정치지형이 만들어 질 수도 있습니다. 촛불항쟁 이후 지지부진한 한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는 여전히 유효한 전략입니다. 진보적 의제를 통해 사회 전체를 왼쪽으로 이동시킬 토대를 만들고, 추락하는 노동자 민중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진보정당의 힘을 키워야 할 때입니다.



## 다시, 노동자 정치운동

“정치얘기는 꺼내지도 마세요. 노동조합 현안도 코가 석자예요.” “진보정당? 그거 해도 안되는 거 아닙니까? 진보정당도 마찬가지로 분열되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하던데요?” “선거 때 한 표는 진보정당 찍고, 세액공제는 하고 있어요. 그 정도면 많이 하는 거 아닌가요?” 현장에서 많이 듣는 얘기들입니다.

정치의 전반적인 우경화가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노동자들의 계급투표는 점점 사라지고, 그만큼 정치적 영향력도 적어지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있기도 합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민주노총은 선언에서 “노동자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령에도 두 번째로 “우리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한다고 분명하게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 민주노총 강령2

“우리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고 제민주세력과 연대를 강화하며, 민족의 자주성과 건강한 민족문화를 확립하고 민주적 제권리를 쟁취하며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한다.”

### 진보정당 창당에 따른 특별결의문 (1999년 8월 25일 15차 대의원대회)

민주노총이 진보정당 건설에 나서지 않으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실현할 진보정당이 힘 있게 건설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노동자중심의 진보정당 건설은 민주노총에게 부여된 역사적 과제다.

## 작지만 큰 변화… 권수정, 최영심

현재 우리 노조 조합원 두 명이 서울시 의원과 전라북도 도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권수정의원(아시아나항공노조 조합원)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으로 올해 7회째를 맞는 ‘우수의원대상’을 수상할 정도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모든 조례에서 ‘근로’라는 표현을 ‘노동’으로 바꾸고, 최저임금에 최고임금을 연동하는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노동자는 물론 여성, 환경, 청소년,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보다 나은 삶을 만들어 내기 위해 열심히 활동 중에 있습니다.



전라북도 최영심의원(교육공무직노조 조합원) 역시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해 전국최초로 광역이동센터 조례를 대표로 발의하여 통과시켰습니다. 시군 운영규정을 통일하고 이를 총괄할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해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 조례안을 만든 것입니다. 또 최영심 의원은 “교육공무직 임금은 정부가 발표한 동일노동·동일임금의 기준 80%에도 못 미친다”며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조례를 개선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은 물론 농민, 청소년, 장애인, 아동, 여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영역을 국회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조합의 단결을 통한 대중투쟁과 동시에 진보정당을 통한 일상적 정치적 투쟁을 전개해 나갑시다.

## 저지를 넘어 노동법 개정 투쟁으로!

96~97년 노동법개악 저지 총파업이후 이십년이 넘도록 노동법은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국회 앞에서 투쟁을 했고, 심지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이 나와라!”라고 외치며 싸우는 것처럼 이제 본질을 쟁취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투쟁해야 합니다.

“물러가라! 저지하자!”를 넘어서 노동자 스스로 정치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첫걸음을 시작해 봅시다. 개악을 거듭해 온 노동법 전면 개정투쟁, 2020년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 각 정권의 노동개악 역사(김영삼정부~박근혜정부)

정부	법안	내용
김영삼 정부		최초로 파견법 도입 시도 / 정리해고제 도입/ 대체근로제 도입 / 파업기간 중 새로운 하도급 생산 가능 / 쟁의기간 중 임금 지급 금지 등 노동개악 날치기
김대중 정부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파견법) 도입	파견법 도입 / 고용불안의 상시화, 전면화 초래 / 진짜 사장이 사라진 법의 사각지대 대폭 확대
	정리해고제 도입	노사정위원회에서 1998년 2월 9일 정리해고제 도입에 합의, 이 합의로 근로기준법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조항이 명문화 / 노동시장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노동 유연화제도 도입 본격화 / 기업들은 명예퇴직, 아웃소싱 등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 인력감축, 구조조정 실시
노무현 정부	기간제법 도입	비정규직 노동자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도입 / 기간제법의 제정으로 퇴직금을 주지않는 1~6개월 짜리 쪼개기계약을 하는 하루살이 기간제 노동자 대거 양산
	파견법 개악	파견법 개정해 26개 업무에 한했던 파견 허용 업무를 32개로 확대 / 파견 노동자를 2년 이상 계속 사용할 경우 직접고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직접고용 간주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후퇴
이명박 정부	노동조합법 개악	복수노조 허용 / 단체교섭창구단일화 제도 도입 / 타임오프제 도입 /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 파트타임 활성화, 파견업종 확대시도 / 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시도 / 공공부문 구조조정, 공공서비스 민영화 등 강행
박근혜 정부	종합적인 노동개악 시도	기간제법 4년으로 연장 시도 / 파견근로법 개정으로 주조, 용접 등 직접 생산 공정까지 파견법 확대 시도 / 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 시도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허용 / 임금피크제 도입 / 공공부문 성연봉제 도입 시도(공공운수노조 파업투쟁으로 저지)
문재인 정부	노동개악 진행 중	???

## 진보정당에 가입합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당원 수 현황입니다. 물론 보수정당은 당비가 천원밖에 안되는 등 실제 활동과 거리가 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동원하고, 교육할 대상의 차이가 확연합니다.

이제 진보정당의 다양성과 분열을 타하기에 앞서 힘을 하나로 모아봅시다.

연번	정당명	당원 수	당비납부 당원수
1	더불어민주당	3,579,111	878,114
2	자유한국당	3,340,979	430,736
3	바른미래당	364,834	48,391
4	민주평화당	96,109	3,685
5	정의당	49,670	35,146
6	민중당	55,481	31,927
7	대한애국당	129,468	20,464
8	노동당	13,705	3,825
9	녹색당	9,374	5,643

**녹색당** [www.kgreens.org](http://www.kgreens.org)

T 02-737-1711 F 02-737-1712 E office@kgreens.org  
(03035)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2-9 2층

**노동당** [www.laborparty.kr](http://www.laborparty.kr)

T 02-6004-2000 F 02-6004-2001 E laborkr@gmail.com  
(07247)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407호

**민중당** [www.laborparty.kr](http://www.laborparty.kr)

T 02-6933-0012 F 02-6442-8441 E theminjungparty@gmail.com  
(0733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7길 11 한국잡지협회빌딩 5층

**변혁당** [rp.jinbo.net](http://rp.jinbo.net)

T 02-717-7999 F 02-717-7999 E revolparty@gmail.com  
(07220)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6 석청빌딩 501호

**정의당** [www.justice21.org](http://www.justice21.org)

T 02-2038-0103 F 02-761-0103 E admin@justice21.org  
(07238)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7 동아빌딩 5층

